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87호  
2024. 12. 27.

- | i-Construction 2.0 이후 일본 산업계의 건설 자동화 동향과 시사점
-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건설산업의 기회 모색
-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i-Construction 2.0 이후 일본 산업계의 건설 자동화 동향과 시사점

- 民·官·學·研의 협력강화와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 -

### ■ 日, i-Construction 2.0 발표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자동화 노력 추진 中<sup>1)</sup>

- 국토교통성은 2016년 4월,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건설기계나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등을 활용한 ICT 시공, 설계·시공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주요 테마로 한 i-Construction을 진행해 옴.
- 2024년 4월, 지금까지 추진해 온 i-Construction의 대응을 심화하여 한층 더 근본적인 건설 현장의 노동력 절감 대책인 i-Construction 2.0을 발표함. 이를 통해 시공, 데이터 연계, 시공 관리의 자동화를 목표로 3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음.<sup>2)</sup>
  - 3대 중점목표 중 시공의 자동화와 시공 관리의 자동화에 있어서는 건설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따른 民·學계의 연구 및 현장 실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

### ■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주제 중 로봇, 자동화 시공의 비중 大

- 일본건설업연합회 「2023년도 건설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sup>3)</sup>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연구개발비에서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세부 연구주제에서도 로봇, 자동화 시공에 대한 연구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일본건설업연합회 6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 기업 42개사, 총 약 1,119억엔의 연구개발비를 기술분야 별로 살펴보면 ‘품질·생산성 향상’ 59%, ‘친환경’ 17%, ‘건설안전’ 14%, ‘헬스케어’ 4% 등으로 나타남.
  - 과거 5년간을 통틀어 ‘품질·생산성 향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차지했으며, ‘품질·생산성 향상’의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시공관리(IT시공 등)가 가장 많고, 로봇, 자동화시공이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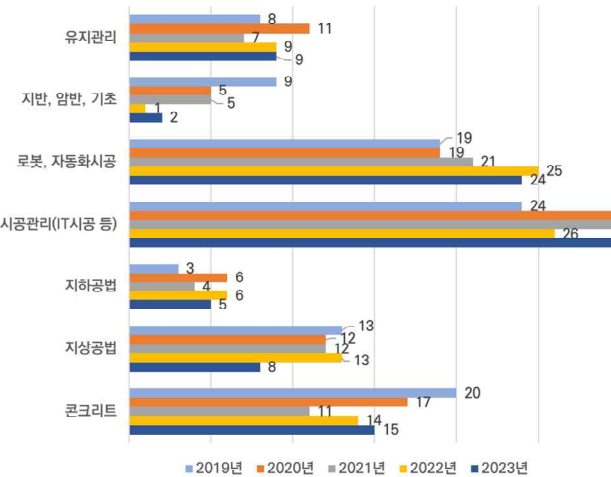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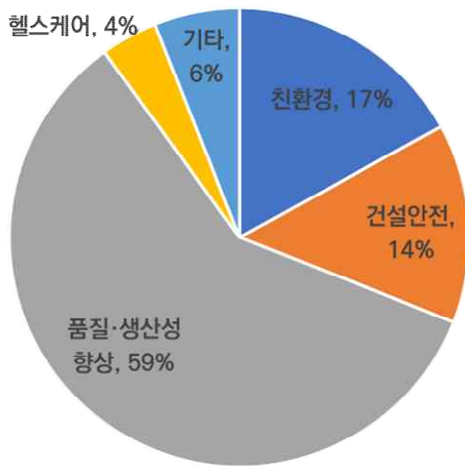
1) 이광표(2024), “日, 시공 자동화 및 건설 ICT 기술 활성화 추진체계와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2) 국토교통성(2024), “i-Construction 2.0 건설현장의 자동화”.

3) 일본건설업연합회(2024), “2023 건설업 연구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이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약 15%를 로봇, 자동화시공이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친환경 분야(17%), 건설안전(14%) 분야의 연구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연구개발비의 분야별 비율      <그림 2> 연도별 연구주제(품질·생산성 향상 분야)



자료 : 일본건설업연합회 홈페이지, <nikkenren.com>, 검색일 : 2024. 11. 15.

- 일본건설업연합회에서는 건설현장에 로봇 도입의 문턱을 낮추고 로봇 활용을 확대하여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sup>4)</sup>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에는 건설로봇의 현장 도입을 검토, 계획, 준비, 실시할 때와 더불어 도입 후의 효과 검증을 할 때 참고가 되는 정보를 각종 건설로봇 소개자료와 현장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제공함.

<표 1> 조사대상 건설로봇 분류와 명칭

분류	대상로봇	조사로봇 명칭	실용화 레벨		
			대여	판매	현장실증
①	운송 로봇	Robo-Carrier(시미즈건설)			○
		스쿠이니(타케나카공무점, 가자마건설)			○
	원격 조종	TawaRemo(타케나카공무점)			○
②	바닥마감 로봇	T-iROBO Slab Finisher(타이세이건설)			○
	검사 로봇	균열 검사 로봇(안도하자마)			○
③	청소 로봇	KEMARO K900(오바야시구미, PLiBOT)	○	○	
	운송 로봇	카몽(타케나카공무점, 렌탈닛켄)	○		
④	철근이음 로봇	토모로보(건로보텍)			○
	콘크리트 타설 로봇	리바이브로보(플로어 에이전트)			○
⑤	마킹 로봇	SumiROBO(일립채널솔루션즈)	○	○	
⑥	원격 감시 로봇	SpotMini(타케나카공무점)			○
	다기능 로봇	Robo-Buddy(시미즈건설)			○

4) 일본건설업연합회(2024), 「건축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

- 실제 현장에 도입한 건설로봇을 ① 기존의 기술을 고도화한 로봇, ②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기반으로 한 로봇, ③ 판매·대여가 가능한 로봇, ④ 협력업체가 도입한 로봇, ⑤ 중소규모의 현장에도 도입 가능한 로봇, ⑥ 현장 환경정비가 가능한 로봇의 6가지로 분류하고 대상이 되는 건설로봇을 선정함(<표 1> 참조).
- 가이드라인 대상 로봇을 보면 대부분이 현장실증 단계이나 청소·운송·마킹 로봇은 이미 판매나 대여가 되고 있어, 건설현장에 즉시 도입하여 효과 검증을 마칩.

## ■ CCRR 심포지엄에서도 건설로봇에 대한 실증 및 현장 도입 연구 多

- 토목, 건축, 로봇 분야의 연구자와 기술자가 한자리에 모여 건설 로봇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조직인 CCRR(Council for Construction Robot Research)은 매년 건설 로봇 심포지엄을 주최하며 일본 건설 자동화에 관한 연구 발표를 진행하고 있음.
  - 총 5가지 세션 주제로 분류하여 일본의 民·官·學·研 등에서의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으로, 2024년 10월에 열린 제22회 건설로봇심포지엄 주요 발제를 통해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건설 자동화(로봇 분야)에 대한 동향을 분석함.
- 주제는 크게 ‘응용 프로그램과 새로운 영역’, ‘건설 생산성 향상·DX’, ‘자동화·자율화’, ‘로봇·키 테크놀로지’ 등으로 나뉨. 주된 연구주제는 건설기계의 자율 주행 및 제어에 관한 실증에 대한 것이었으며, 실증 후 사용자평가와 검증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표 2> 참조).
  - 실증 및 현장도입 연구는 주로 정부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여 연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초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단계 이후에 필요한 후속 지원 연구임.
  - 연구 주체를 살펴보면, 단독 연구보다 여러 주체가 함께 연구하는 협력 연구를 통한 응용·실증연구가 활발하며, 학계는 독자적인 기초·응용연구에 주력함.
  - OPERA(Open Platform for Earthwork with Robotics and Autonomy)와 같은 건설로봇 제어기술 외에도 AR(Augmented Reality)/MR(Mixed Reality)을 활용한 가시화 연구나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이용한 위치추정, AI(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을 도입한 자동화 지원기술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하드웨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연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

&lt;표 2&gt; 2024년 건설로봇심포지엄 세션별 발표주제

세션	발표주제	단계	연구주체			
			民	官	學	研
1	연약지반에서 건설기계 주행로 보강대책 검증 및 성능시험	실증	○			
	4족 보행 로봇에 의한 건물 조사 기술의 개발	응용		○		○
	영상 분석 AI를 활용한 안전 감시 카메라 시스템	응용	○			
	영상 내 이상 상황 검출을 위한 Detective Network	기초			○	
	통합 시공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생산성 향상 평가	실증	○			○
2	건설로봇과의 협동 환경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 시스템 개발	응용	○			
	로봇-오리엔티드 기법에 의한 제조·조립·분해·순환형 설계	기초			○	
	건물 외벽 점검용 드론의 비행 안전성과 촬영 성능 평가	실증	○			
	수중 점검용 로봇 촬영 영상의 위치 정보 식별	기초		○		○
	점검·청소 로봇의 전·반자동 복합 유도 실험	응용		○		○
3	자율 이동 바닥면 촬영 로봇	실증	○			
	콘크리트 강도 추정과 수직 벽면 검사 로봇	실증			○	
	나사 형상 보강재 삽입 기구 개발	응용			○	
	랜드마크와 자이로드메트리를 융합한 자율 주행 로봇	응용	○			○
	바닥 마감 로봇 개발 및 실증	실증	○			○
4	수륙 양용 불도저 시공의 가시화	응용	○			
	대형 원격조종식 예초기에 의한 제방 제초의 자동화	실증		○		
	댐 퇴사 처리의 무인화 시공 기술을 위한 실증 시험	실증	○			
	수중 측위 장치를 이용한 수중 건설 기계의 측위와 원격 조작	응용		○		○
5	모델 예측 제어를 이용한 중소 규모 시공의 자동화	기초	○			
	숙련자 모방 자율 굴삭 궤도 생성 알고리즘	기초	○			○
	유압 굴삭기 자동화를 위한 각속도 제어 시스템 검증	실증		○		○
	QR코드를 이용한 가공 시스템 제어	응용			○	
	자율 가지치기 로봇을 위한 딥러닝 연구	기초			○	
포스터	OPERA를 활용한 유압 굴삭기 자동 굴착 시스템 개발	실증	○	○		
	동력제어 건설기계의 개발과 실증 시험	실증	○			○
	OPERA의 자율 굴착기에 의한 토사 적재	실증	○			○
	건설 기계 시공의 자동화 기술 평가를 위한 지표	기초		○		○
	IMU를 이용한 유압 굴삭기의 버킷 위치 추정의 정밀도 향상	응용	○		○	
	원격건물 조작 시 영상 멀미에 대한 연구	기초				○
	AR마커와 수중 화상처리기술을 통한 자재고정 위치인식	응용			○	
	영구 자석을 이용한 천장 주행 가능한 롤링 로봇의 설계와 실험	기초			○	
	MR디바이스를 이용한 전자파 레이더 외벽 검사 결과 가시화	응용			○	

## ■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 자동화 연구에 대한 民·官·學·研 협력이 필수

- 일본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실증 및 현장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제도적 지원을 함.
  -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작업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건설 자동화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각 주체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됨.
- 건설 자동화 기술에서 소프트웨어(AI, AR/MR, 데이터 분석)와 하드웨어(로봇, 드론, 센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
  - 한국은 이미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하드웨어를 결합한 융합기술 개발과 더불어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주제를 발굴해야 함.
-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이후 현장 실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 역시 건설 자동화 개발의 지속적 추진 및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규제 완화)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함.
  - (파일럿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에서 신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민간 확산을 유도함.
  - (기술 표준화) 기술 상용화를 위해 표준화를 우선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
  - (사회적 수용성) 기술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며, 건설 노동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도입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함.
- 건설생산성 향상과 차세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정수완(부연구위원 · swchung@cerik.re.kr)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건설산업의 기회 모색

- 기후위기 대응방안 구체화에 따른 탄소중립 기술 및 상품 개발 필요 -

### ■ COP29, 기후 행동 강화 위한 '바쿠 기후 통합 서약 채택<sup>5)</sup>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가 2024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됐음.
- COP는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논의하는 기구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197개 협약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행동 계획을 수립해왔음.
- 올해 개최된 COP29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파리협정 제6조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뤘음.
- 의장국은 신규 기후 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 글로벌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① 적응역량 강화, ② 기후탄력성 제고, ③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그리고 2022년 COP27을 통해 출범한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 프로그램(2030년까지 감축 의욕 강화 및 이행을 목적으로 연 2회 글로벌 대화체 및 투자 중심 행사 개최) 등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Baku Climate Unity Pact)'으로 타결했음.

### ■ 기후위기 관련 주요 주제와 COP29의 성과

- (신규 기후 재정 목표(NCQG) 합의) :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상을 통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기후 투자를 연간 1조 3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
  - 재원 조달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중 연간 3천억 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조달,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통한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됨.
-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지침 확정) :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감축실적(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s)을 이용한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감축 실적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 불일치 식별 및 처리 방안, 국제 등록부 운영 방식 및 추가

5) 5) 참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공동보도자료, 2024. 11. 25

기능 등 세부지침이 마련됐음.

- COP가 지정한 기관이 감시할,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에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 기준선과 탄소 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도 확립됐음.
- 이로써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고 환경의 온전함, 지배구조의 투명성 그리고 이중 집계를 피할 수 있는 확고한 회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을 이용한 국가 간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력이 가능해졌음.
- 상기한 제도를 통한 국제탄소시장의 출범은, 연간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후 투자 목표와 연계해,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됨.

● (전지구적 이행점검 / Global Stocktake, GST) :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엔 개최될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그리고 2025년 6월 개최될 부속기구회의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제출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강제이행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전지구적 이행점검’ 규정임.
- 2023년 COP28에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COP29에서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① 전지구적 이행점검 절차의 보완,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연례 대화체 운영, 그리고 ③ UAE 대화체 운영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감축) : 감축 프로그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됐음.

-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출범한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로 ①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② 기술, ③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향함.
-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의 결정문은 COP29의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결과(그린 및 블루 인프라를 이용해 탄소 포집과 저장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를 반영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게 됐음.
- 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과 관련된 협상은 당사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2026년 제8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종결됐음.

● (적응) : 전지구적 적응 목표를 상설 의제화하고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를 포함하는 ‘바



쿠 적응 로드맵'을 설치해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합의함.

- 작년 COP28에서 채택된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United Arab Emirates Framework for Global Climate Resilience : 적응역량 강화, 회복력 증진, 취약성 저감 등 글로벌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주기별 및 부문별 목표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촉구하고 전 세계적 적응 행동을 강화하려는 체계)를 기반 삼아 COP29에서는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의 이행 방식 그리고 목표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

● **(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논의가 진행됨.

-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COP19에서 설립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WIM)의 정기 검토가 진행됨.
- WIM 집행위원회 및 산티아고 네트워크(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OP25에서 설립된 기구)의 공동연차보고서 검토도 이루어졌음.
-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당 논의는 2025년 개최 예정인 회의로 연기되어 지속적으로 다뤄질 예정임.

● **(투명성):** COP29는 기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과 개도국 참여 촉진을 위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을 출범함.

- COP29는 '글로벌 기후 투명성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를 통해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 모든 당사국이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첫 번째 BTR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투명성 의무 이행에서 국가 간 상호 신뢰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Baku Global Climate Transparency Platform, BTP)을 출범시켰음.

● **(정의로운 전환):** COP27이 출범시킨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이 합의에 이루지 못해 2025년 6월에 개최될 제62차 이행부속기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임.

● **(기술지원) :**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기후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지향하는 '기술이행프로그램(Technology Implementation Programme, TIP)'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음.

- 재원 조달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서 합의하지 못했으나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술이전에 대한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Poznan Strategic Programme on Technology Transfer)’의 성과를 분석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COP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방안 역시 당사국 간 의견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음.

## ■ 한국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대한 시사점

- COP29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의 감축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COP29 Declaration on Reducing Methane from Organic Waste)’ 선언에 참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감축 목표 그리고 구체적 정책 및 로드맵 수립을 약속함.
  - 또한, COP28에서 서명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연장선에서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용량을 2022년 250GW보다 6배 늘어난 1,500GW로 확충하고, 2040년까지 8,000만 km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는 목표를 내세운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참여함.
- COP29는 기후 투자에 2035년까지 매년 1조 3,00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이러한 규모의 재원 마련에 선진국, 개도국, 민간, 공공 등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투자와 연결시킬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부재함.
  -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유엔기후협정 당사국들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이에 수렴시키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실제 국제탄소시장 작동까지는 요원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29를 통해 드러난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이 건설산업에 제공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기업은 탄소 중립적이고 기후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축물과 인프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신규 기후 재원 목표로 인해 모든 당사국에서 친환경 그린 및 블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건설기업들은 그린 및 블루 인프라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관련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회 요인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해당국 공

공 및 민간부문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197개 당사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환경 규제의 강화 추세와 조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 탄소시장의 출범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업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건설 자재 개발 및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해야 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2)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 지난 1개월간 국회는 총 971건의 입법안이 제기되었으며, 이중 건설산업 관련 입법은 총 24개 법안에 불과함.
- 통상 월별 약 40~60건의 건설 관련 법안이 신규 발의되는 것에 비해 이달의 경우 입법이 과소한 상황이나 이는 현 계엄 및 탄핵정국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가 개최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주요 관심이 통상 입법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허나, 이번 달에도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법안이 신규 발의됨. 대표적으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제정)」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할 만한 법안임.

### 이슈 1: 기재부 주도의 재정 절감 중심 중앙조달 강화 심화하나?

- ◎ 우리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중앙집중형 발주제도와 발주기관 재량권 확대 간 방향성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어 왔으며, 공공조달의 세부 내용별 양자 모두를 필요해 의해 선택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반복되어 옴.
- 건설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 위탁발주 의무화, 발주·낙찰제도의 개별 운용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의무화 등은 중앙집중형 발주제도의 단면이라 볼 수 있으며, 일정 비율 내 낙찰자 평가기준의 발주청별 재량 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자율 운용 등은 발주기관의 재량권 강화 사항이라 볼 수 있음.
- ◎ 허나, 최근 신규 법률안이 정부 입법되고 통과가 예상되기에 중앙집중형 조달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조달을 통한 정책 수단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06115호)이 바로 그것인데 현행 공공조달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절차를 중심으로 규율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 조달청의 사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일반법이 필요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힘.
- 해당 제정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게 공공조달을 총괄·조정하며, 그 운용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기하고 있고 개별 발주청의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중앙집중형 조달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 개별 법률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포함됨.
- 먼저 법률안에서는 ‘적기 조달’, ‘재정 효율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원칙’,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정책 지원’ 등의 공공조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안 제5조),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조달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가져야 할 ‘중소기업 이익배려 원칙’, ‘산업 경쟁력 제고’, ‘안정적 물량 배분을 통한 산업육성’ 등의 원칙을 외면한 채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 중시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 또한, 법률안에서는 공공조달 정책의 방향 결정, 특례 신설 검토 등을 위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빠른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에 공공조달 체계가 기민한 반응이 필요한 시대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사료됨(안 제8조 등).
  - 그 외에도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다양한 위탁 사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기관 지정을 통한 사실상 관치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안 제19조 및 제20조).
- ◎ 해당 법률안은 공공조달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있어 그간 높은 공공조달의 중요성(GDP의 9.3% 해당)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 설계의 방향과 운용에 있어 오랜기간 사회적 합의가 배제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입법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이슈 2: 제도적 스마트건설 진흥 첫 단추...계속 강화·보완해야

-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도입·활용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정책 혼선이 지속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또한 부재한 상황이었음.
-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발표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R&D 확대 운용 등은 정부 주도의 추진으로 볼 수 있으며, 작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 등은 민간 주도 활동으로의 이양으로도 볼 수 있음.
- ◎ 허나, 최근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6736호)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중요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정의가 혼재되어 활용되던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함.
  - 또한, 국토교통부에게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법정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 부여와 더불어 이를 지원할 스마트건설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싱가포르, 일본과 유사한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명확히 함.
- ◎ 다만, 구체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예산 지원, 실증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술마켓 및 발주제도 다변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사업비 현실화 등의 내용이 제외되어 있기에 이번 입법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11.22.~'24.12.20)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주택법」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843호(김정재 의원 등 11인)] ('24.11.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 추진</li> <li>- (제안방향)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li> </ul> </li> </ul>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867호(서범수 의원 등 11인)] ('24.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다는 지적</li> <li>- (제안이유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li> <li>- (제안방향)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 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li> </ul> </li> </ul>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875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4.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 신설</li> <li>- (제안방향②)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li> <li>- (제안방향③) 효과적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 허용</li> <li>- (제안방향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li> </ul> </li> </ul>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901호(염태영 의원 등 14인)] ('24.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현행법이 개정('23.12.26.)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파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li> <li>- 하지만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정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기에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b>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여(안 제53조제3항 신설)</li> </ul>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902호(염태영 의원 등 15인)] ('24.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히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에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종전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필요</li> <li>- <b>(제안방향)</b>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안 제66조제3항 등)</li> </ul> </li> </ul>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915호(염태영 의원 등 15인)] ('24.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반지하주택 정비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비하여 반지하주택을 신속 정비에 한계가 있기에 개정 필요</li> <li>- <b>(제안방향)</b>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반지하주택의 신속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이 반지하주택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li> <li>·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추가 규정(안 제43조의3제9호·제10호 신설)</li> <li>·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시·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그 반지하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의 면적의 1.2배를 더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li> <li>·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49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li> <li>·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반지하 세입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안 제49조의3제6항 신설)</li> </ul> </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921호(정준호 의원 등 10인)] ('24.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해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수수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입찰참여자(시공사)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 마련, 신고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li> </ul> </li> </ul>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5986호(위성곤·권영진 의원 등 26인)] ('24.11.28. 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나,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li> <li>- 허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이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li> <li>- 이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촉진 유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li> <li>- (제안방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안 제3조)</li> <li>- (제안방향②)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목조건축과 목재산업에 관한 연구와 지원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 가능(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li> <li>- (제안방향③)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목조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품질기준 개선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교육 수수료 의무 부여(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li> <li>- (제안방향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등도 공동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 검토 시행(안 제15조)</li> <li>- (제안방향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고 관련 기술 및 재정지원 가능(안 제16조)</li> <li>- (제안방향⑥)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목조건축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안 제17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⑦)</b> 국가기관 등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목조건축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안 제18조)</li> <li>- <b>(제안방향⑧)</b>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국가기관 등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목조건축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대상 사업 시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도록 노력(안 제19조)</li> <li>- <b>(제안방향⑨)</b>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목조주택 보급 촉진을 위해 표준설계도 고시(안 제20조)</li> <li>- <b>(제안방향⑩)</b>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모든 건축물에 목재로 제작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안 제21조)</li> <li>- <b>(제안방향⑪)</b> 산림청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정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안 제22조 및 제23조)</li> <li>- <b>(제안방향⑫)</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제26조)</li> </ul>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115호(이종욱 의원 등 12인)] ('24.12.2. 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공공조달의 규모 증가와 전략적 활용의 보편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술혁신, 기후 환경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li> <li>- 현재 우리나라 조달법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절차에 관한 것이거나,</li> <li>-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법」 등 조달청의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li> <li>- <b>(제안방향)</b>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의 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li> </ul> </li> <li>• <b>(주요내용①)</b>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적시·최적 조달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고, 경쟁·공정·투명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산업 육성·기술혁신,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안 제5조)</li> <li>• <b>(주요내용②)</b>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 방향,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li> <li>• <b>(주요내용③)</b>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안 제9조)</li> <li>• <b>(주요내용④)</b> 기획재정부에게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립·추진 권한 부여(안 제10조)</li> <li>• <b>(주요내용⑤)</b>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환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취약·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안 제11조에서 제13조)</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요내용⑥)</b>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기존 공공조달의 특례와 중복성,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소관 공공조달 특례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위원회 보고(안 제15조 및 제16조)</li> <li>· <b>(주요내용⑥)</b>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 통계를 공공조달기관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 역량개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평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조달청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부터 제20조)</li> </ul>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162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4.12.3.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①)</b> 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 중이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이유②)</b>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시행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45조의3 신설)</li> </ul> </li> </ul>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436호(윤영석 의원 등 10인)] ('24.12.12.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신고를 하는 소형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 해체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 중</li> <li>- 허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절차에 대해 간소화 요구가 빈번하고, 건축물 외벽의 경미한 마감재 수선도 해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 합리화</li> <li>· <b>(주요내용①)</b> 대수선 범위 중 해체 허가 대상 조정(안 제2조) :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li> <li>· <b>(주요내용②)</b> 해체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구체적 제시(안 제30조제2항) :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구체적 규정</li> <li>· <b>(주요내용③)</b>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세분화(안 제30조제4항) : 해체계획서 내용 중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 등은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효율성 도모</li> <li>· <b>(주요내용④)</b> 해체 허가 기간 단축(안 제30조제6항) :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을 통해 해체·허가 기간 단축</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442호(윤영석 의원 등 10인)] ('24.12.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의 불편 사항이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개선 (안 제11조)</li> </ul> </li> </ul>
「건설산업 기본법」  <div>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505호(여기구 의원 등 10인)] ('24.12.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기에</li> <li>- 현행법에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 과정의 친환경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유도 필요</li> <li>- (제안방향)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 장려(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li> </ul> </li> </ul>
「건설기술 진흥법」  <div>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509호(여기구 의원 등 10인)] ('24.12.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li> <li>-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li> <li>- (제안방향)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부재와 관련된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 사용 장려(안 제57조제2항)</li> <li>*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기에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 필요</li> </ul> </li> </ul>
「주택도시 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619호(박용갑 의원 등 10인)] ('24.12.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정부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금을 설치한 시·도가 전무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li> <li>- 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LH가 위탁사업자로 개발한 과천우정병원은 아파트</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로 정비되어 2024년 입주가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LH 등 공공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용자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7개 부동산투자 회사에 2024년 11월 기준 총 4,151억원을 출자한 덕분에 대구 서구와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성남시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됐고, 서울 강남·영등포구는 도시재생공간 지원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매입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li> <li>- <b>(제안방향)</b>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도별 정비기금에 용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용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 유도(안 제9조제2항제1호 다목·라목, 제2호라목, 제2호의2, 제3호라목 신설)</li> </ul>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645호(윤준병 의원 등 13인)] ('24.12.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우선적 고려 필요</li> <li>- <b>(제안방향)</b>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안 제38조제2항 신설)</li> </ul> </li> </ul> </li> </ul>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b>규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654호(박홍배 의원 등 18인)] ('24.12.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li> <li>- <b>(제안방향)</b>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3조 및 제26조)</li> </ul> </li> </ul>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693호(박성민 의원 등 10인)] ('24.12.1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li> <li>-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 업무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b>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과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 마련(안 제17조)</li> </ul>
「건축사법」 <div>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695호(문진석·권영진 의원 등 13인)] ('24.12.1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은 참고하도록 규정 중</li> <li>- 허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해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 상황</li> <li>-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 업무와 대가로 인해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 발생</li> <li>- <b>(제안방향)</b>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적용(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li> </ul> </li> </ul>
「주차장법」 <div>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707호(허영 의원 등 10인)] ('24.12.1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li> <li>-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기에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li> <li>- <b>(제안방향)</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4 신설)</li> </ul> </li> </ul>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734호(이원택 의원 등 10인)] ('24.12.19. 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출력제한 문제 발생</li> <li>- 또한, 전력망 확충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범부처 차원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한 협력 필요</li> <li>- <b>(제안방향)</b>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을 통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성공적 '2050 탄소 중립' 이행 이바지</li> <li>• <b>(주요내용①)</b>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심의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총 실무위원회를 두고, 전력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요내용②)</b>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해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전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li> <li>· <b>(주요내용③)</b>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 시 전원집중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li> <li>· <b>(주요내용④)</b>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li> </ul>
「건설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6736호(송석준 의원 등 21인)] ('24.12.19.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활성화를 하는 등 세계 건설산업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황</li> <li>-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li> <li>- <b>(제안방향)</b>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li> </ul> </li> <li>· <b>(주요내용①)</b>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li> <li>· <b>(주요내용②)</b>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가능(안 제19조의2 신설)</li> <li>· <b>(주요내용③)</b>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 그 밖의 관련 인력 현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가능(안 제19조의3 신설)</li> <li>· <b>(주요내용④)</b>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 평가 가능(안 제19조의4 신설)</li> <li>· <b>(주요내용⑤)</b>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포함)를 설치·운영 가능(안 제19조의5 신설)</li> <li>· <b>(주요내용⑥)</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 가능(안 제19조의6 신설)</li> <li>· <b>(주요내용⑦)</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 가능(안 제19조의7 신설)</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 관련 시책 수립·추진 가능(안 제19조의8 신설)</li> </ul>
「주택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규제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748호(권영진 의원 등 10인)] ('24.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 중이나,</li> <li>-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 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는 데 한계 발생</li> <li>- 또한,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입주자 피해도 우려되기에 전체 세대로의 바닥구조 시공 완료 전 미리 기준 미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통해 보완시공 반복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 예방 필요</li> <li>- (제안방향)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89조제5항 신설)</li> </ul> </li> </ul>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6774호(김상훈 의원 등 11인)] ('24.12.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사례가 전무하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방향)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하도급자를 제외(안 제25조의3)</li> </ul> </li> </ul>